

2017 전북도 · 교육청 결산검사 마무리

전북도, 수범사례 6건 · 개선 6건... 도교육청 수범사례 5건 · 개선 5건 · 현지 시정사항 2건

전라북도 도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동안 전북도청, 전북교육청에 대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교육비 특별회계 포함)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도의회 허남주 의원(대표위원), 정호운 의원(환경복지위원), 최영규 의원(교육위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북교육청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2017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다.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는 개선 및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불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도는 수범사례 6건으로 보조금 관리계획 확립을 통한 예산 효율화,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 환급제 실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국 1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공영회사업에서 한우광역사업단 우수시상 등 기관표창이 있었다.

특히,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 개선 및 지적사항은 6건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은 그 평가에 따라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수범사례 5건으로 폐교 또는 학교이전 시설을 활용한 안전체험관 설치와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조성,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방채 조기상환 이자절감액으로 원금을 추가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

하는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 및 권고사항 5건, 현지 시정사항 2건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5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전라북도 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9월3일~18일)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10월 전라북도 홈페이지 재정 공시란에 게재하여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최인정 도의원, 무소속 출마 선언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사진)이 17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한다. 최 의원은 "군산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의 정당구조로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계를 느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무소속 출마 배경을 밝혔다.



무소속 출마까지 오랜 기간 고민과 번뇌를 거듭했다는 최인정 의원은 "탈당에 따른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신념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무너져 내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丁의장, "국의 출장 전수조사 여부 조속히 결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류 출장 논란 등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과거 국의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의 출장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 국가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의 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위유성 해의 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의 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국회의원의 국의출장에 대한 백서제자를 통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 의장은 방송법 처리 등 법안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4월 국회가 공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표했다.

정 의장은 다만 "이러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의정으로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뉴스시스

홍중화 '땡처리 후원금' 논란에 "선관위와 협의"

홍중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에 남은 정치후원금 42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와 계속 협의해서 한 것이고,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의원의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남은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하면서 취임 보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홍 장관의 경우도 '더좋은미래'에 매일 20일 20만원씩 후원했다가 19대 의원 임기 종료로 앞두고 남은 후원금 422만 1830원을 기금으로 후원하면서 잔액 0원을 만들었다. 김 원장의 사례와 같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깨끗한 선거 위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김광수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한 계층 정치참여 기회 확대 하자는 취지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 시 갑)은 17일,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고 청년·정치신인·경제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

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

집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 부정 모금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경제적약자 등이 출마를 포기하고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발의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식선거기간 중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민의(民意)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